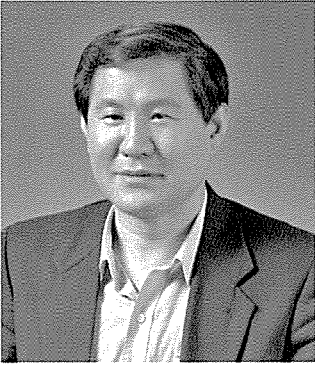


2006 사회복지시설 평가이렇게 한다



김동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총괄위원장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IMF로 대변되는 국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서비스의 양질성을 유도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인권중시에 적응하는 측면도 있어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지원의 세 가지 측면의 목적을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 정착, 시설간 선의의 경쟁 유도, 시설입소생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하며,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을 통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의 목적을 지닌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1999년 첫 평가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도까지 매년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평가가 시행되었다.

1차(1999~2001) 평가는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2차(2002~2004) 평가는 일부 종별시설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기존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데 주요 초점을

〈표〉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경과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1998. 6.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1999. 6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연구용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정신요양시설 (59) 및 장애인복지관 (36) 등 총 95개소 평가
2000	아동영양시설 (28), 노인요양시설 (60), 여성입소시설 (61), 정신지체장애인시설 (52), 부랑인시설 (33), 사회복지관 (285) 등 총 519개소 평가
2001	아동 (244), 노인양로 (81), 장애인 (134) 등 총 463개소 평가
2002	정신요양시설 (55), 부랑인시설 (33), 장애인복지관 (56: 시·평가), 노인복지회관 (시·도 평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2003	노인복지시설 (시·도평가), 모자복지시설 (시·도평가), 사회복지관 (334: 서울·경기시·도 자체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개발
2004	사회복지시설 (275), 장애인생활시설 (238: 시·도평가) 평가 ※시설종류별 평가대상은 설립년수가 3년 이하인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가정폭력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 약 200개소 제외
2005	정신보건시설 176개소 (정신요양 55, 사회복지시설 121), 부랑인복지시설 (38), 장애인복지관 (123) ※ 노인복지회관 (152개소)은 평가지표 개발
2006	사회복지관 352개소, 노인복지회관 88개소, 노인복지시설 249개소 (무료양로 65개소, 무료요양 94개소, 무료전문 48개소, 실비양로 5개소, 실비요양 12개소, 유료양로 1개소, 전문요양 3개소) 등 총 689개소 평가 진행중

“ 1차(1999~2001) 평가는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2차(2002~2004) 평가는 일부 종별시설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기존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데 주요 초점을 두었다. 현재의 3차(2005~2007) 평가는 기존의 2차레에 걸친 평가과정을 통해 나타난 평가 전반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평가체계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두었다. 현재의 3차(2005~2007) 평가는 기존의 2차레에 걸친 평가과정을 통해 나타난 평가전반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평가체계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고 둘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 자료들을 제공하였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였으며, 끝으로 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시설에 대한 정책적 근거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문제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첫번째로 평가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상시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두번째로, 평가 이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사후관리지원체계 미비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번째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적 편차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평가위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평가지표 역시 그 완성도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8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과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보완과 새로운 방향설립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평가의 도입(Participatory Evaluation)

평가지표의 구성과 평가진행에 있어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참여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Locality)이 가능한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심사원의 자질 및 역량 강화

평가심사원의 체계적 교육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풀을 구성함으로써 평가심사원의 자질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한다.

평가 지침서 및 평가매뉴얼 개발

실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침서 및 평가매뉴얼 개발과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러한 매뉴얼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가지표의 정량화 및 공동지표의 가중치 증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보다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정량지표를 늘리고, 특히 이종간의 비교가 가능한 핵심수행 측정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개발하여 공동지표로 만들며 그 가중치를 늘려야 한다.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

현재의 평가시스템 상에서는 평가 이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사후관리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에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복지시설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우수시설의 벤치마킹 기회는 물론이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의 평가 사후관리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재무적·비재무적 인센티브 강화

현재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인력개발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평가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의 표창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수시설의 해외연수 등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온전한 평가를 시행하기에는 평가주체에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동시에 피평가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게도 핵심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기관이 역량을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 좋은 평가결과를 얻으려면 상당한 변화의 노력들도 동시에 요구된다. 비록 평가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평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 그리고 피평가대상기관 모두에게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